

## 김경일의<한국의 근대와 근대성>- (백산서당, 2003)에 대한 서평 -

박 노 자\*

이 책은 - 제목이 가리키는 대로 - 식민지 시절부터 1990년대까지 거의 한 세기에 걸친 한국적 근대성 만들기 과정에 대한 종합 분석이다. 식민지 시대에 일본이 어떻게 문화적·담론적 헤게모니를 장악했는가 라는 문제부터 1950년대의 서구 문화의 범람, 개발독재의 문화 정책, 1980~90년대 사회의 개인과 전체의식 등의 문제까지 하나로 묶여져 근대적 한국인의 형성 과정이 다각적으로 조명됐다. 한국적 근대의 미완성이나 탈(脫)근대의 문제 등이 사회적 의제로 뜨거운 관심의 대상이 된 지금에, 김경일 교수의 이 책이 여러 가지 논쟁에 요긴한 역사·사회학적 자료를 제공한 셈이다.

광범위한 자료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저서이지만 저자가 초점을 맞추는 핵심적인 부분 중의 하나는 분명히 그람시 (Gramsci)적 의미의 헤게모니라는 것이다. 헤게모니는 피지배자의 자발적 - 적어도 피지배자 자신이 ‘자발적’이라고 생각할 만큼 무력적 강요의 요소가 노골적이지 않는 - 동의와 동원을 의미하는데, 식민지 시기를 ‘무력 지배’로 생각하는 민족주의 사학의 틀에만 익숙한 상당수의 독자들에게 “식민지 권력의 일상적·문화적 헤게모니”라는 표현이 낯설지도 모른다. 그러나 저자가 체계적으로 설득력 있게 보여주듯이 (23~43쪽) ‘근대화’ 주체로서의 표상을 구축하는 데에 상당 부분 성공한 일제 식민지 당국은 문화적 헤게모니를 통한 피지배자의 포획·포섭의 전략을 잘 구사했다. ‘조선 폐습의 개혁’이나 ‘조선

\* 오슬로 대학 교수, 한국학

인의 성격 개량, 자본주의적 덕목인 근검·절약 등의 선포 등 일제 당국의 근대화론적 구호들이 상당수의 근대화 지향적 피지배민 지식인들의 동의를 얻었으며, 철도나 도로 영화 등의 일반 민중의 일상을 완전히 바꾸어버린 기술적 ‘근대화’의 상징물들이 피지배민의 상상을 압도하는 데에 성공했다. ‘근대화’라는 지상 명령의 이용에 의한 헤게모니 장악이, 현실에서 무력에 기대지 않을 수 없는 폭압적 식민 권력으로 하여금 마치 ‘합의 독재’와 같은 면모를 띠게 한 것이다.

그러나 저자가 정확하게 지적하듯이 일제의 헤게모니 장악의 전략이 단순한 서구 중심주의적 담론의 이용에 머무르지 않았다. 전통적 형벌(태형 등)이 상징했던 가부장적 국가의 면모도 존속했으며, 유교적인 ‘충효’ 가치의 ‘장려’ 정책도 아직 전통의 세계에서 살고 있었던 대다수 조선인들의 자발적 동의를 얻는 것을 그 목적으로 했다. 서구에 대한 근대주의적 동경과 ‘전통’을 동시에 이용하는 헤게모니 전략! 저자도 지적하듯이(81~88 쪽), 박정희 등의 개발 독재 정권들이 바로 이 전략을 이어받아 계속 사용해왔다. ‘조국 근대화’와 ‘민족 전통의 계승’이라는 양면의 이데올로기적 도구는, ‘합의 독재’를 유지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긴요하게 사용되었다. 위로부터의 ‘근대화’ 프로젝트의 너무나 깊은 식민적 뿌리에 대한 폭 넓은 자료와 분석을 제공해주는 것은 이 책의 큰 장점이라 보여진다. 식민지 시대를 단순한 ‘이민족의 무력적 억압’으로 상상하는 민족주의적 사학의 선입견에 이 책은 정면으로 도전한다. 그러나 ‘순수한 무력적 수단에 의한 통치’의 신화와 아울러 이 책이 ‘우리의 부단한 민족적 저항’이라는 또 하나의 민족주의적 신화를 비판적으로 해부한다.

물론 저항이 전무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다만 ‘민족’의 담론을 내세웠던 식민지의 모든 운동들을 다 ‘저항’의 거대 담론으로 무조건 묶어 긍정 일변도의 의미를 부여해버리는 우리 ‘민족주의 사학’의 관습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이다. 가령 1930년대 초반의 ‘조선학’ 열풍을 보자. 물론 ‘민족문화’를 내세우는 것은 일본의 동화 전략에 맞서는 의미도 있었지만 ‘문화’에 대한 관심 집중은 또 다른 영역 - 특히 정치나 사회, 경제 -에서의 일제의 헤게모니와 식민지적 근대성 등에 대한 암묵적 동의라는 함의도 아울러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민족주의 우파가 이야기했던 ‘문화’나 ‘조선 민족의 개조’는, 근대적 가치 우월성에 대한 확신이나 ‘불건작’ 과거에 대한 부정이라는 핵심적인 측면에서 일제가 내세웠던 ‘조선의 문명화’와

과연 질적으로 얼마나 달랐는가? 결국, 새로 ‘개척한’ 식민지, 만주의 시장을 미끼로 삼아 조선인 부르주아를 ‘협력’과 ‘타협’으로 유도하고 있었던 일제 당국의 ‘친일화’ 공작을 뿌리치지 못한 것이 민족주의 우파의 단순한 ‘훼손’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담론적인 종속성의 문제이기도 한다는 것은 합당한 결론으로 보인다(43~63쪽). 한국 ‘개화’ 담론의 중심적 구성 요소인 근대 지상주의는 ‘동아시아적 근대’의 ‘화산’으로서의 표상을 구축하려 했던 일제와의 타협의 여지를 이미 처음부터 내포했던 것이다.

식민지 시기와 전후시기를 중심으로 하는 이 책에서 아쉽게도 별다른 언급이 없지만 일본의 메이지유신을 ‘근대화’의 모델로 삼는 근대 지상주의적 의식은 이미 갑신정변(1884년) 때부터 조선 말기의 원(原) 민족주의자들(proto-nationalists)에게 뚜렷하게 보였다. 한 마디로 제국주의에 대한 서구 지향적인 민족주의의 담론적 - 그리고 때로는 현실적 - 종속성과 정치적 대립성이야말로 ‘이식되는 근대’의 주된 변증법이 아닌가 싶다. 한국의 우파 민족주의의 담론적 빈곤성과 종속성이 그 진모를 노정한 것이 바로 ‘독립투사’를 자임했던 이승만이 통치했던 1950년대이다(129~171쪽). 정치 모델로 제시된 ‘자유민주주의’는 대개 단순히 ‘악마적 공산주의’의 반대어로, 즉 ‘반공의 이념’으로 이해돼 ‘민주주의 종주국 미국’에 대한 예속을 강화시켰으며, 통치자들이 시민 사회에 강요하려 했던 어용적 민족주의(소위 ‘일민주의’ 이데올로기)는 일제 시대의 전체주의적 이념들과 거의 차별성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었다. 결국 ‘애국’과 ‘민주주의’를 공식 이념으로 내건 신생 ‘민주 국가’에서 학교에서의 일제 식 ‘애국 조화’와 ‘학도 호국단’ 등이 학생들을 여전히 괴롭혔으며 일제의 ‘황민 서사(誓詞)’와 빼닮은 ‘우리의 맹세’나 국기에 대한 경례 등이 통치자들의 위신을 상징했다. 어용화된 우파 민족주의적 이념이 일제의 유산의 존속 이상(以上)의 의미를 가지지 못했으며, 도심의 일상을 지배하게 된 것은 지배자 양키의 조잡한 문화 현상들이었다(173~208쪽).

1880년대에 모방으로 시작한 조선의 주변부적 근대는, 70여년이 지나도 ‘자주’에 호소하면서도 그 ‘자주’를 담론적으로 이루어내지 못하는 내부적 모순을 잘 극복하지 못했다. 어용적 이데올로기가 활력을 결여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발전의 원동력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이 책에서 얻을 수 있는 대답은 바로 “대안을 추구하는 반체제적 운동들이다”라는 것이다(275~309쪽). 미국과 소련의 헤게모니를 동

시에 초월하려는 제2공화국 때의 혁신·통일 운동, 미국과 일본에 의한 신식민화를 반대했던 1960년대의 굴욕 외교 반대 운동, 그리고 1970년대와 이후의 민중·민주 운동은 바로 그것이다. 개화기·일제 시기 민족주의 우파 식의 모방적·종속적 민족주의의 한계성은 이들 운동에 의해서 상당 부분 지양된 것이다. 저자의 생각을 계속 이어나간다면, 1970~80년대의 민족·민중 운동의 주된 한계인 민족적인 폐쇄성이 지양된 것이 1990년대 후반의 국제 연대적 운동에 의해서라고 말할 수 있지 않나 싶다. 한국의 평화 운동가들이 바그다드에 가서 자신의 몸으로 이라크의 약자들을 미제의 폭탄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 민족적이었던 한국의 반체제 운동이 이제 드디어 전 세계의 반체제 전선의 유기적 일부분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리라 본다. 그러한 의미에서는 반체제 운동이야말로 한국 현대사의 ‘정통’으로 보는 데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긍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와 함께 이 책이 잘 말해주는 사실은, 한국의 반체제 운동이 처음부터 민중적, 반체 연대적 성격을 가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남북 대립 1950-53년간의 전쟁으로 계급 운동이 원천적으로 봉쇄된 남한에서는 현실적으로 권력의 가장 유력한 반대자가 바로 ‘지주 정당’으로 부를 만한 대중을 단순히 동원의 대상으로 보아 온 민주당이었다(139쪽). 권력의 반대자인 야당 정치인조차도 한국 전쟁을 동족상잔이 아닌 “자유 진영과 공산 독재의 투쟁의 시험장”으로 볼 만큼 미국의 냉전 이데올로기가 신성화(神聖化)된 1950년대의 남한(163쪽), <사상계>와 같은 비교적으로 진보적인 잡지조차도 제3세계의 해방 운동에 무관심했던 1950년대의 남한(167쪽), 그 때의 남한이야말로 미국 중심의 세계 체제의 헤게모니가 가장 완벽하게 작동되는 종속 지역이었을 것이다. 세계 체제의 이데올로기적 마취는 비록 제2공화국 시절의 혁신계의 통일, 중립화 운동으로 ‘민족 통일’이나 ‘반미’에 대한 터부가 부분적으로 무너진 적도 있었지만(283~284쪽) 1960-70년대에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었다. 서구형 민주주의의 문제점이나 통일, 민중 운동의 중요성에 대한 자각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1970년대에도 김대중 등의 민주화 운동의 상층부는 북한과의 체제 경쟁이나 경제적 급성장의 ‘필요성’을 ‘현실’로 인식했다(287쪽). 즉, ‘민중’이 점차 새로운 화두로 등장하는 1970년대라 해도, 세계 체제의 중심부가 강요한 ‘자유민주주의’, ‘경제 성장’과 같은 관념들의 배타적인 절대

성을 벗어난 것은 아직도 아니었다.

결국 1980년대에 이르러서야 한국에서도 세계 체제의 이데올로기적 해체모니에 전면으로 도전하려는 급진주의적 세력들이 생기고, 지식인의 투쟁과 노동자의 계급 운동이 결합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그 때도 급진적인 ‘운동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던 중도 자유주의적 ‘민주화’ 운동가들의 최상 목표가 어디까지나 ‘독재 타도’, 즉 부르주아 국가 권력의 탈환에 있었기에, 계급 운동이 ‘주류 정치인’의 권력 쟁취에 동원돼 그 본연의 의미를 상실하는 측면은 강력하게 나타났다(295-296쪽). 1987년의 대투쟁으로 노동자층이 지배층으로부터의 상당한 경제적 양보들을 따 내는 데에 성공했지만, 관료와 부르조아지 그리고 그 대리인들이 권력을 사실상 독점하는 자본주의 국가의 정치권에 독자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 세력을 구성하는 데에 실패했다. 1987년의 ‘미완의 혁명’이 제도적 부르조아 민주주의의 확립이라는, 계급 운동에 보다 유리한 조건을 가져다주었지만 1990년대의 소비주의 열풍이라는 지배 이데올로기의 새로운 형태의 공세는 반체제 진영의 기반을 크게 흔들었다. 제도권 언론들의 여론 조작, 유권자 매수 등의 방식의 민주주의 형해화 등의 문제가 겹쳐져 ‘민중·노동자에 의한, 민중·노동자의 정치’, 즉 진보 세력의 본격적 정치 세력화가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화두로 남는다.

그리고 이 책에서 지적하고 있듯이(304~307쪽) 1980년대의 민중 세력의 기반이 내파되기 쉬웠던 이유는 반체제 진영도 역시 지배 이데올로기의 경제적 성공의 물신화 등의 가치에 압도를 당해 연대와 인간성, 개인의 ‘다름’ 존중, 환경 위주의 체계화된 대안적 가치관으로 잘 맞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정치적 ‘반마’가 어느 정도 허용된 만큼 한국에서의 세계 체제 중심부의 정치적 지배가 문제화, 상대화돼 가고 있지만, ‘우리 마음 속의 미국’, 즉 이미 내면화된 중심부의 경제 물신적 가치 체계가 오히려 풍요의 1990년대에 더 공고화된 모습을 보였다. 문화 비평가이자 시인인 문부식이 말한 것처럼 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어도 우리 안의 ‘미국’을 지우기가 훨씬 어려운 것이다. 대안 가치 형성의 문제 해결에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새롭게 각광 받게 된 반전·평화, 국제 연대, 환경 등의 운동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민중 진영 안에서조차도 반(反)폭력, 양성 평등, 생태 본위의 사고가 보편화된 것은 결코 아니다.

이 책이 이야기해주는 한국 반체제 운동의 한계성, 즉 지배적 가치로부터의 탈피와 대안 가치 확립의 빈번한 실패의 원인을 과연 어떻게 봐야 하는가? 물론 이 책에서도 수차례 언급하고 있지만 냉전 체제가 굳어져 가는 과정에서 냉전의 최전선에서 성립된 남한이라는 냉전적 ‘반공 국가’ · ‘분단국가’에의 소속 그 자체가 사상과 실천 상의 한계를 가져다주지 않을 수 없었다. 남한 사회의 구성원인 이상 남한 사회의 국시(國是)인 ‘반공’에 충성을 표시하지 않는 것은 ‘비국민’으로 전락을 의미했다. 남한의 사회 운동의 급진적인 일부가 이 ‘반공’의 장벽을 1980 년대에 접어들어야 넘었지만 보수, 극우 언론의 영향권에 남아 있는 수많은 남한 주민들에게 지금도 ‘적색’이 절대적인 적대적 타자의 기호로 받아들여져 있다. 국가주의적 전통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 ‘국가’와 ‘반공’이 동일시되는 현실이 반체제 운동에의 커다란 제한으로 작용했다.

또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한국 사회에서 애당초부터 반체제 운동의 역량과 국가에 의해서 동원이 가능한 역량이 비교를 할 수 없을 만큼 달랐던 것도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된 듯싶다. 이승만 정권과 후속 극우 정권들이 일제로부터 군, 경찰관 등의 억압 기구 전문가의 인력부터 국립 학교 등의 세뇌 기구의 체제까지 다 이어 받은데다가 미국이라는 세계 체제의 패권 국가의 자원과 권위에 거의 무제한적으로 기댈 수 있었지만, 반체제 운동이 분단과 전쟁으로 극도로 분산된 민중 역량의 결집이라는 지난한 과제를 안고 있었다. 억압과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 장악이라는 지배의 양면에서 일제의 경험에다가 미국 자원과 개발 이데올로기 등의 권위적 상징들을 활용할 수 있었던 남한의 극우 반공 체제는, 조봉암 선생의 법살(法殺)과 부단히 조작되는 ‘간첩 사건’으로 대표되는 억압의 예봉을 휘두르면서 동시에 학교, 언론, 군대를 통해서 개인적인 체제 순응적 ‘성공’에의 욕망과 군국주의적 ‘군가’를 거의 전인구에 체득시키는 등 그람시적 의미의 헤게모니 장악에 만전을 기했다. 이와 같이 가난한 남한 사회에 비해서 너무나 커보였던 ‘초대형’의 ‘전지전능한’ 국가 기구에 반체제적 (계급적 내지 민족적) 입장에서 맞선다는 것 자체도 매우 어려웠지만, 학교와 군대, 그리고 1970년대 이후에 텔레비전 등의 관영 미디어를 통해서 민초 차원까지 스며들어가 내면화되는 지배적 가치를 전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한 면에서는 데모를 많이

해도 징집 통지서를 받기만 하면 별다른 조직적 저항 없이 전두환 정권의 군대에 끌려가는 1980년대의 ‘운동권 학생’들이나, 진보 정당이나 노조, 시민운동의 조직 안에서 성희롱 등을 감행하는 1990년대의 일부의 남성 진보 운동가들의 모습은 결코 이상하게 비춰지지 않는다. 이 현상들은, 시민 사회를 완전히 압도해버리는 지배 체제 역량의 우위와, 전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지배 가치 (군사주의, 남성 우월주의)의 내면화 상황을 잘 반영하는 것이다. 이 책에서 나타나는 재미있는 통계에 의하면,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진 훨씬 뒤인 1992 년에도 한 여론 조사 응답자의 거의 57%가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전체를 위해서 희생시켜도 좋다고 대답했다 (214쪽). 이처럼 체제가 체득시킨 전체주의적 가치들이 이미 많은 이들의 자아의식의 일부분이 되고 만 것이다. 여성, 반전/평화 운동이 헤게모니적 남성우월주의, 군사주의 담론에 균열을 일으키고, 진보적 시민운동의 독립적 목소리가 크게 들리기 시작한 것은 불과 1990년대의 후반이었다. 즉, 국제적 냉전이 종식되고 세계적으로 미국의 헤게모니가 각종의 도전 (유럽 연합, 중국의 부상 등)을 받는 시기가 돼야 남한의 극우 반공 헤게모니가 본격적으로 전복되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에서의 ‘근대성’의 이식·성숙·자주화·지양의 파란만장한 100여년의 역사를 이론적으로 세밀하게 분석한 이 책은, 한국 근·현대사의 체계적 이해를 위한 필독서라고 생각한다. 이 책을 정독한 뒤에 오늘날의 극우 매체들의 숭미(崇美)주의적 패러다임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탈(脫)민족주의적 반체제 운동의 가능성이 어떤 것인지, 한국 내의 진보 운동과 밖에서의 진보 운동의 ‘코드’를 어떻게 맞출 수 있는지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 이 책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언론들이 유포시키는 우리의 당면 현실에 대한 환상들을 여지없이 깨는 것이다. 예컨대 언론들이 1990년대를 ‘개성의 시대’라고 부르고 자본이 선도하는 소비주의 열풍과 ‘개성’을 혼돈하지만, 이 책은 사회의 국가주의적 의식과 연고주의적 현실 앞에서 개체의 자율성이 아직까지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211~230쪽). 그러한 의미에서 이 책이 해당 분야의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 운동가들과 한국 사회·역사에 관심을 가진 모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